

# Deloitte.



## 높아지는 아태지역 환경의식, 미래 지속가능 성장의 발판

Nicola Weir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 파트너,  
Sanjukta Mukherjee 딜로이트 미국 시니어매니저

2023년 10월  
Deloitte Insights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 목차

|                                          |    |
|------------------------------------------|----|
| 01 기상이변으로 급변하는 아태지역 주민들의 삶 .....         | 05 |
| 02 아태지역 규제환경, 기후행동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 .....    | 09 |
| 03 소비자 기후행동 뒷받침하는 기업이 가치창출의 기회 잡는다 ..... | 11 |
| 04 정부 정책과 시스템 변화가 탄소중립 전환 촉진한다 .....     | 14 |
| 05 견고한 저탄소 경제 창출을 위한 협력 .....            | 17 |





딜로이트가 서베이에 기반해 소비자 동향을 추적하는 ‘글로벌 컨슈머 트래커’(Global State of Consumer Tracker)의 분석 결과,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지역 소비자들은 지속가능 제품을 사용할 의지가 강력했고 시스템 차원의 기후변화 해결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여름 중국에서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대륙의 젖줄’ 양쯔강(揚子江)이 바닥을 드러냈다.<sup>1</sup> 호주에서는 홍수가 잦아지면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sup>2</sup> 인도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천 명의 주민이 주거지를 위협받고 있다.<sup>3</sup> 2023년 2월 뉴질랜드에서는 100년 만에 최악의 사이클론이 발생했다.<sup>4</sup> 아태지역 곳곳에서 전례 없는 폭염으로 도로가 녹아내리고<sup>5</sup>,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태국 방콕의 기온은 한때 54℃까지 치솟았다.<sup>6</sup>

아태지역에서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IPCC는 전 세계가 21세기 중반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즉각 최우선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기후 재앙을 예측한 바 있다.

딜로이트 경제연구소(Deloitte Economics Institute)의 분석에 따르면, 기후사태가 악화되면 복합적인 악영향이 발생해 아태지역 생산성과 공공지출, 경제성장이 악화되어 2070년까지 약 미화 96조 달러(약 12경4,193조 원, 2022년 원/달러 평균환율 1,293.68원 적용)의 국내총생산(GDP)이 증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과 인프라에 투자해야 할 생산자 본과 지식이 기후재앙의 피해를 복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웰빙을 관리하는 데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sup>7</sup>

아태지역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완화 및 적응 조치를 적용하는 ‘기후탄력적 개발’(climate-resilient development)이 필수다. 그렇다면 각국은 이러한 변화를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규제 및 기업 환경, 소비자 최신 동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딜로이트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반년마다 23개 국가 및 지역 소비자들의 환경 인식을 조사하고 기후변화가 실제로 발생한다고 믿는지 묻는다. 신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분석하면 소비자의 신념이 어떻게 구매, 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아우르는 행동과 선택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의 응답을 종합하면 아태지역 인구의 현재 환경의식을 파악해, 소비자들의 기후대응을 가속화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딜로이트 컨슈머 트래커

딜로이트 컨슈머 트래커는 북미, 유럽, 동아시아, 남아시아 등 23개 국가 및 지역에서 18세 이상 성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오차 범위는 ±3%이며, 연령·젠더·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역별 가중치를 둡니다. 본고에 포함된 결과는 2023년 3월 23~30일 실시한 서베이 결과에 근거합니다.



딜로이트 서베이 결과, 아태지역 소비자 대다수는 기후변화가 인간이 초래한 일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구매 품목, 정부 참여 방식, 직장과 가정 내 대화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의 일상적 선택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아태지역 대부분의 정부는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국가별 탄소감축 목표와 시한을 설정했다. 딜로이트 서베이에서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주도적 역할에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혀,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계에서는 소매 및 소비자 부문 선도기업들이 가치사슬 내 파트너들에게도 투명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기대치를 요구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을 발전시키고 있다. 모든 단계의 공급업체들은 주요 고객사로부터 탄소감축 활동, 원재료 선택, 내부 ESG 관행 등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해 달라는 요구를 갈수록 더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대외 지속가능성 보고서, 제품 라벨링, 브랜드 커뮤니케이션뿐 아니라 출시 예정 제품 설계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환경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기업과 정부는 기후대응 의향은 있지만 선뜻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아태지역 소비자들은 지속가능한 소비 선택을 하고 싶어 한다. 이들의 의향이 직접적인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의 친환경 제품을 일상적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하고, 저배출 에너지원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돼야 하며, 폐기물 재활용 방식이 편리해야 하고, 저탄소 교통수단이 늘어나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체계적, 구조적 환경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범을 정하고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동시에 제공하는 등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아태지역의 기후대응 노력은 전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딜로이트 이코노미스트들은 최악의 기후변화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경제구조를 전환하면 GDP가 감소하는 대신 경제 호황을 이뤄 2070년까지 47조 달러(약 6경800조 원, 2022년 원/달러 평균환율 1,293.68원 적용)의 순GDP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을 향한 모멘텀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믿는 친환경 가치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 강력한 사업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시민사회, 정책입안자들이 시스템적 관점으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상호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우리 앞에 펼쳐진 기회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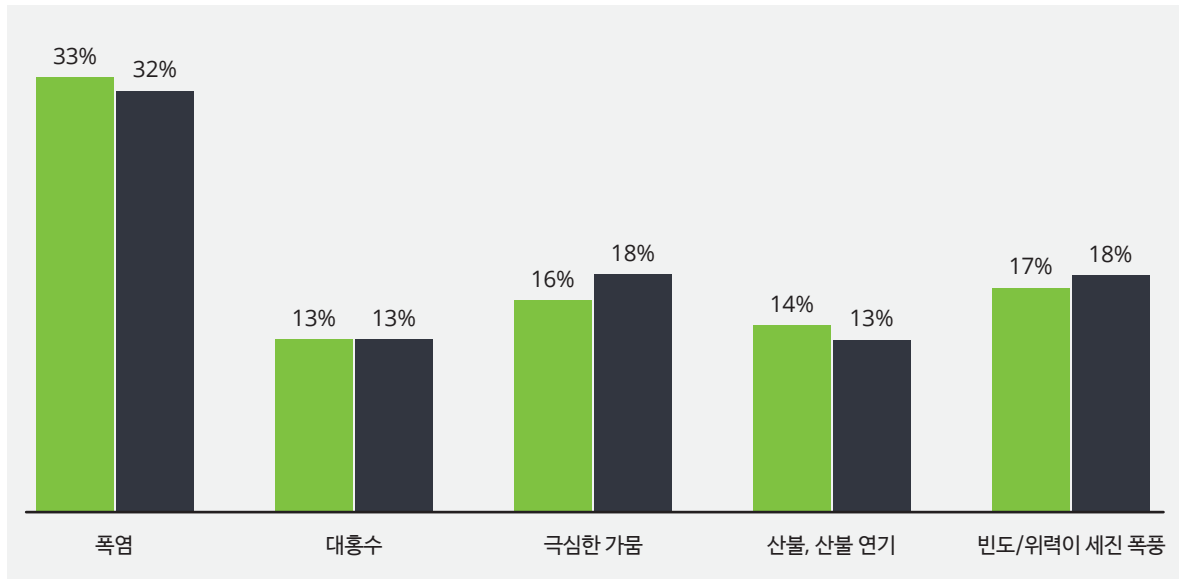
## 01 기상이변으로 급변하는 아태지역 주민들의 삶

기후변화는 아태지역에 이미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딜로이트 서베이에 따르면, 아태지역 소비자들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충격을 이미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아태지역 응답자의 1/3이 최근 1년 이내에 폭염을 겪었다고 답했다. 또 1,000명 중 130명이 심각한 홍수를 겪었고, 반대로 1,000명 중 160명이 극심한 가뭄을 경험했다(그림 1).

그림 1. 지난 6개월 내 다음의 기상이변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

● 아태지역 ●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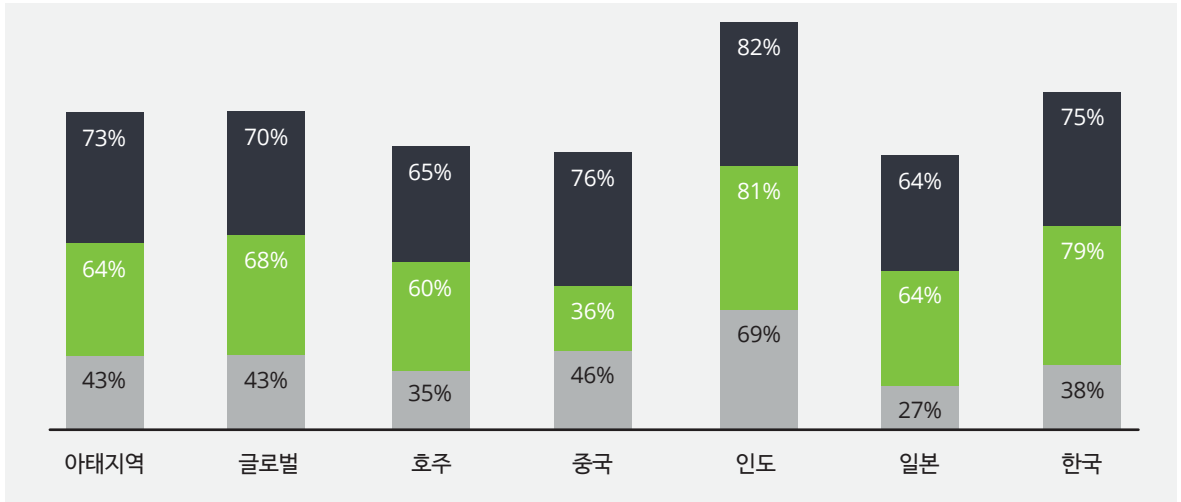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컨슈머 트래커(Deloitte's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2023년 3월



아태지역 응답자 중 64%는 기후변화가 '비상사태'라고 답했고, 43%는 지난 1개월 내 기후변화에 대해 '우려 또는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역 내에서 기후 비상사태 인식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는 비율은 인도가 가장 높았다(그림 2).

그림 2. 아태지역 응답자 중 기후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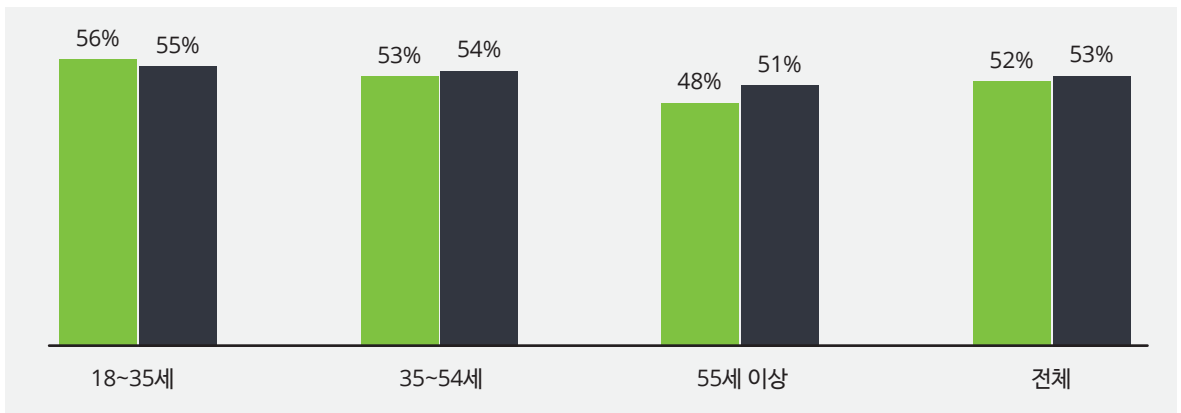
- 지난 1개월 내 기후변화에 대해 우려하거나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
- 기후변화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는가?
- 인간의 활동으로 기후변화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가?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컨슈머 트래커(Deloitte's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2023년 3월

그림 3. 기후대응의 일환으로 구매행태나 개인의 행동방식을 바꿨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

- 아태지역
-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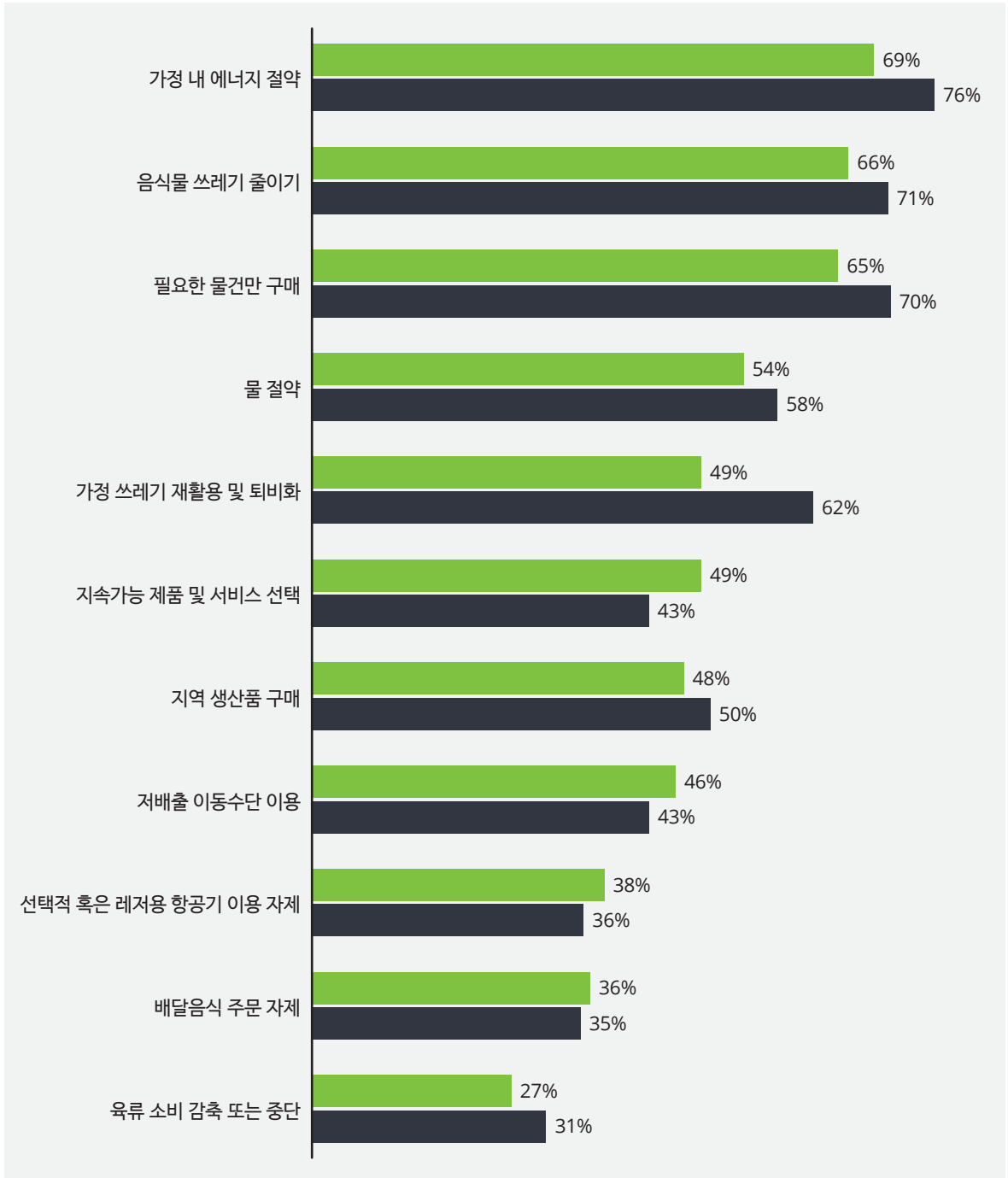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컨슈머 트래커(Deloitte's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2023년 3월

아태지역 소비자 52%는 기후변화를 우려해 행동방식이나 구매행태를 바꿨다고 답했으며, 이러한 응답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높았다. 아태지역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행태 변화는 가정 내 에너지 절약, 물건 구매 자제, 음식을 쓰레기 줄이기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응답자는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성 활동을 해야 한다는 데 강력히 동의했으나, 재활용, 퇴비화, 음식물 쓰레기 감축 등 폐기물 관리 수준은 글로벌 평균에 뒤처졌다(그림 4). 이에 따라 아태지역은 폐기물 관리 문제를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인프라에 투자해야 소비자들의 행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자주, 항상, 가능할 때마다 다음의 지속가능성 행동을 실천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

● 아태지역 ● 글로벌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컨슈머 트랙커(Deloitte's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2023년 3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경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태지역 응답자의 70%가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변화에 대해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고 답했고, 58%는 “육류 소비 줄이기, 퇴비화 및 재활용, 저배출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눈다”고 답했다(그림 5).

그림 5. 지난 12개월 내 본인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변화에 대해 다른 이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

● 아태지역 ●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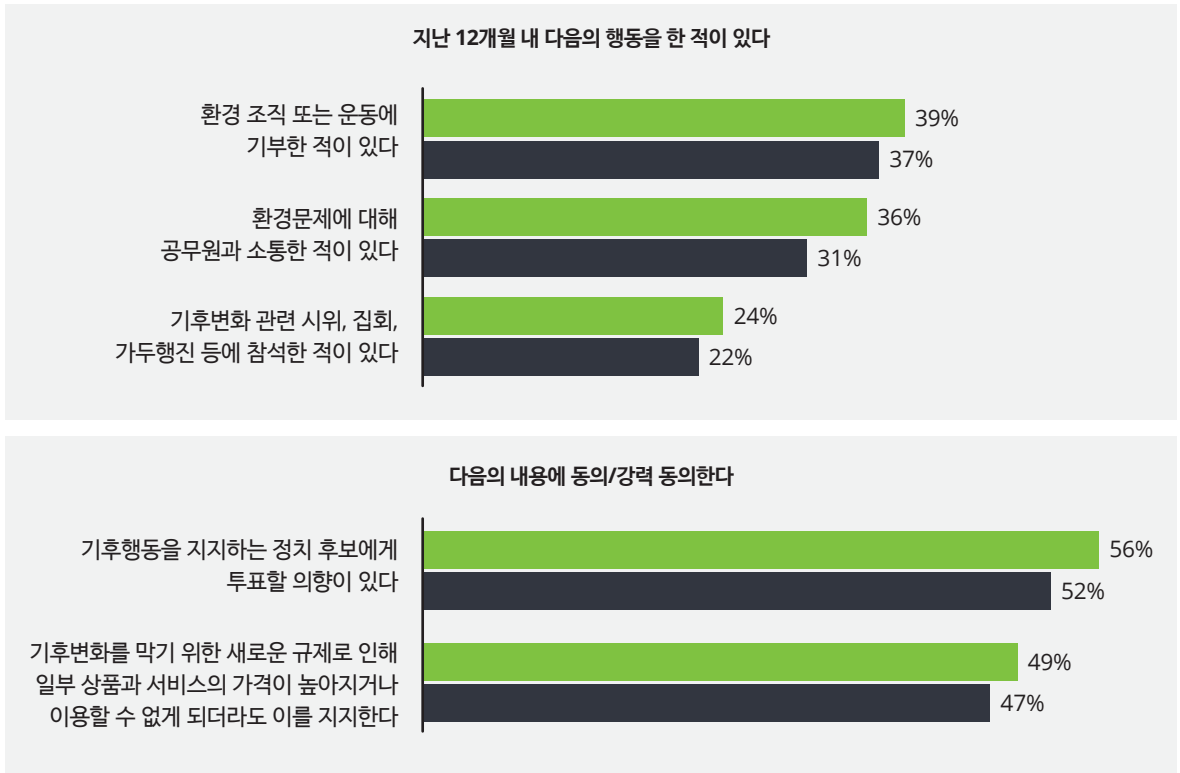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컨슈머 트랙커(Deloitte's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2023년 3월

아태지역 소비자들의 관심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치지 않고, 시민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행동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지역 응답자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공무원들과 소통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기부를 하고 기후변화 관련 집회에 참석한다는 비율이 글로벌 평균보다 높았다. 기후관련 규제에 찬성한다는 비율도 글로벌 평균보다 소폭 높았다. 아태지역 응답자 49%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로 인해 일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높아지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러한 규제를 지지한다”고 답했다(그림 6).

그림 6. 공적 영역에서 나타난 아태지역 소비자들의 지속가능성 행동

● 아태지역 ● 글로벌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컨슈머 트랙커(Deloitte's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2023년 3월

## 02 아태지역 규제환경, 기후행동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

기후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강해지는 만큼, 아태지역 규제환경도 이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가 실존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별 탄소중립 달성 기한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각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정부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

|    |                                                                                                                                                                                                                                                                                                                                                                                              |
|----|----------------------------------------------------------------------------------------------------------------------------------------------------------------------------------------------------------------------------------------------------------------------------------------------------------------------------------------------------------------------------------------------|
| 한국 | 한국 정부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공식 명칭을 정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과 관련 전략을 수립했다. 이 중 기후변화 관련 국가차원의 전략 목표로는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존', '육상 생태계 보호' 등이 있다. 특히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품의 재활용 방식에 기반해 재활용 부과금을 징수한다. 가장 높은 재활용 등급을 받은 제품에 대해 생산자는 부과금의 최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재활용 가능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
| 호주 | 호주 정부는 '기후 액티브'(Climate Active)라는 정부지원 제도를 통해 '기후 액티브 탄소중립 표준'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의 탄소중립 달성 노력을 장려한다. <sup>8</sup> 또 배출감축기금(ERF, Emissions Reduction Fund)을 조성해 배출량 감축 및 탄소 저장을 위한 새로운 관행과 기술을 도입한 조직 및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 중국 |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을 도입해 대기·수질·고형폐기물·소음 공해에 세금을 부과한다. 또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화학 산업 등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에게 환경오염물질 폐기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 청정 생산, 에너지 보존, 탄소배출 감소 등을 촉진하고 있다.                                                                                                                                                                                                                 |
| 인도 | 인도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개정안을 제26차 유엔기후변화총회(UNCCC)에서 발표한 후, 2022년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에 통고했다. 인도 정부는 NDC 개정안에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탄소 집약도 비율을 45%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207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장기 목표의 일환으로, 기후 목표와 이행 단계를 한층 심화한 것이다. NDC 개정안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중심의 접근법도 포함돼 있으며, 저탄소 전환 및 지속가능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도 재확인하고 있다.                                                                  |

## 일본

일본 정부는 지속가능 경제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기반의 두 가지 정책을 도입했다. 우선 '디지털 전환(DX) 투자촉진세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고, '탄소중립 투자촉진법'을 통해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탈탄소화 가속화에 도움이 되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 뉴질랜드

뉴질랜드 정부는 '탄소배출감축 계획'(Emissions Reduction Plan)과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2005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이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제로 쓰레기 또는 쓰레기·오염·탄소배출 복구 등을 위한 새로운 세대의 입법안과 전략 수립 ▲제품과 재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자연 생태계를 재생해 미래 세대에 건강한 환경 제공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된 시스템적 사고방식 추구 ▲기후변화 직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 공정성과 포용성 실현 등을 위한 지속가능성 노력을 펼치고 있다.

##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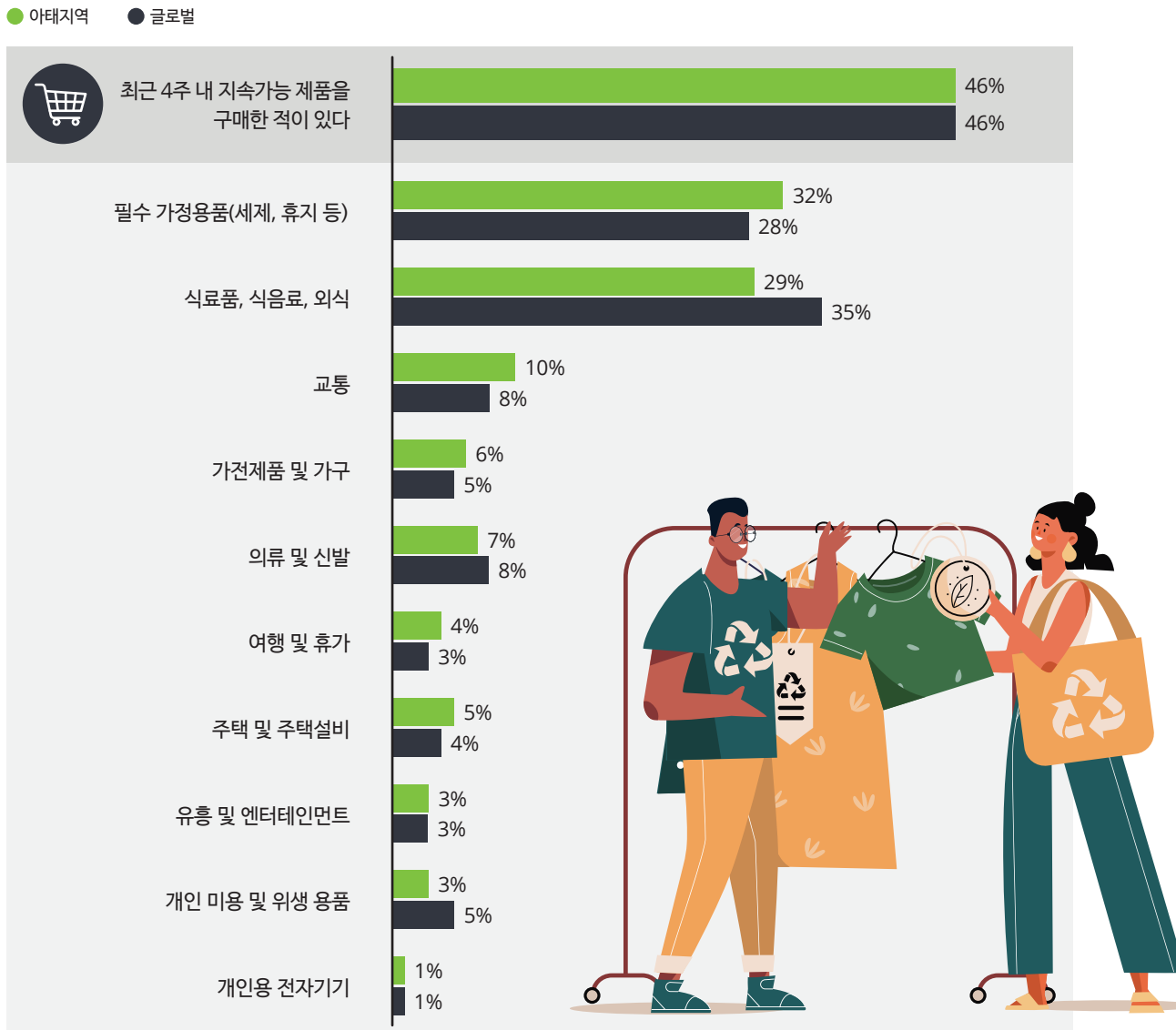
대만은 국가발전위원회(NDC)가 '2050 탄소중립 로드맵'(Taiwan's Pathway to Net-Zero Emissions in 2050)의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 및 처리, 환경 위생 개선, 공중보건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폐기물 처리법'(Waste Disposal Act)을 제정해 효과적인 폐기물 청소 및 처리, 환경 위생 개선, 공중 보건 유지를 촉진하고 있다. 또 화장품 리콜 규정과 식품 및 관련 제품의 리콜 및 폐기 규정 등도 수립했다.



## 03 소비자 기후행동 뒷받침하는 기업이 가치창출의 기회 잡는다

아태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이처럼 높은 환경의식과 행동의지를 사업기회로 보고, 소비자들의 지속가능성 선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딜로이트 서베이에서 소비자들은 이미 환경 문제에 높은 가치를 두고 가정용품과 식품 등 일상적 구매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아태지역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보다 지속가능성이 높은 재료와 더욱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해 생산됐거나, 환경친화적 용기로 포장된 제품을 '지속가능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그림 7).

그림 7. 최근 4주 이내 지속가능 제품을 구매했다는 응답자 비율과 구매제품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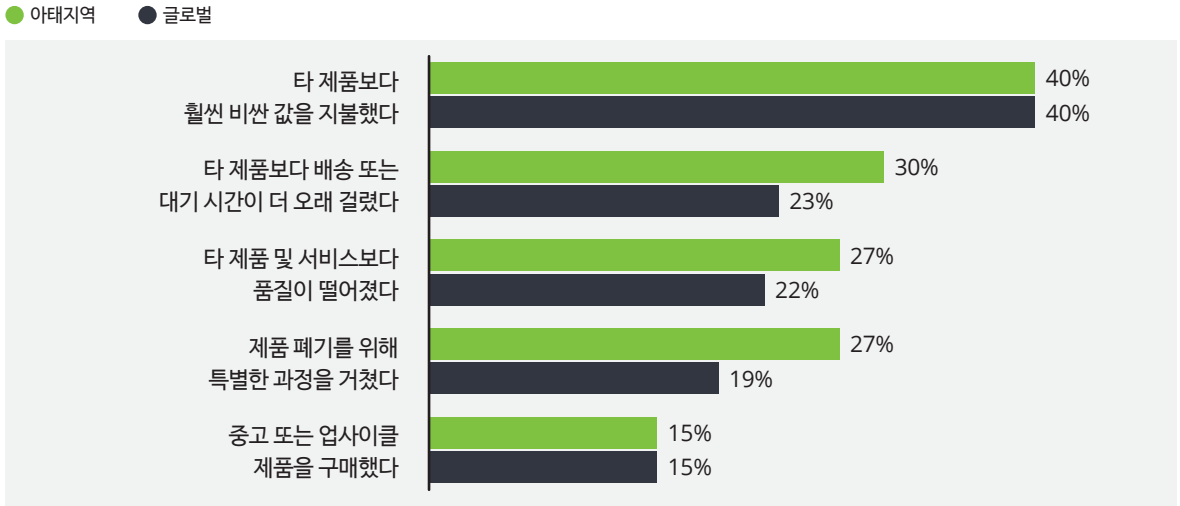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컨슈머 트래커(Deloitte's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2023년 3월

아태지역 소비자들의 지속가능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최근 더 비싸더라도 지속가능 제품을 구매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40%에 달하는 등 지속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을 보인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아태지역 소비자들 사이에서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이 일반화되지는 않았다(그림 8).

그림 8.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지속가능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

가장 최근 지속가능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다음의 설명에 해당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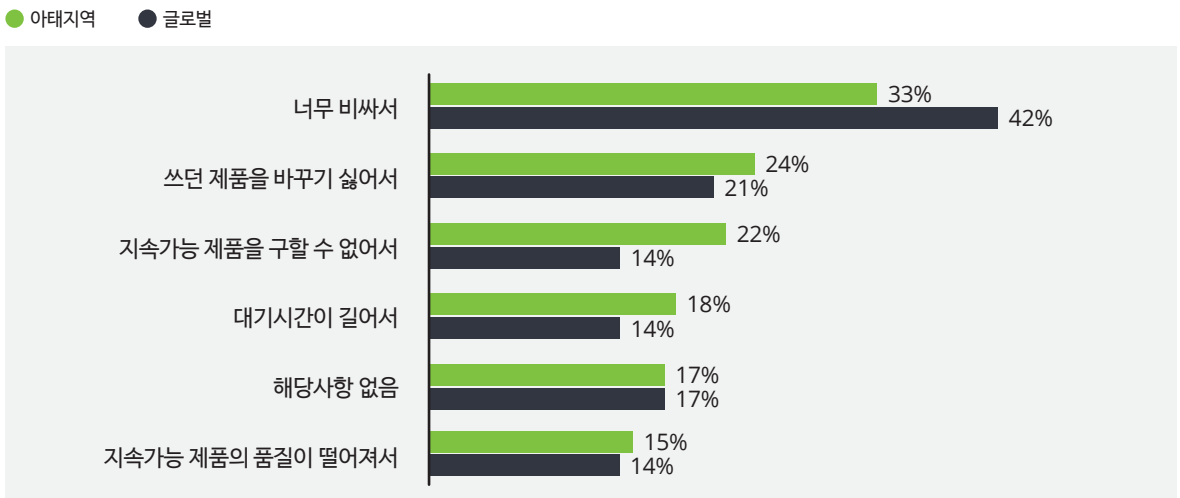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컨슈머 트랙커(Deloitte's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2023년 3월

글로벌과 아태지역 대다수 응답자들은 항상은 아니더라도 가끔은 지속가능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주 내 지속가능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아태지역 응답자 29%는 높은 가격을 가장 큰 장벽으로 꼽았고(33%), 그 다음으로는 불편함과 접근성을 들었다(그림 9).

이 대목에서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비용과 환경보호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 없이 편리하고 적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이러한 응답은 현재 지속가능 제품의 마케팅이 기존 제품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림 9. 지난 1개월 내 지속가능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이유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컨슈머 트랙커(Deloitte's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2023년 3월

아태지역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기업들은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압박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기업들이 가치사슬의 매 단계에서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사업 환경은 이뿐만 아니다. 소비자들도 더욱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솔루션을 기업들에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 및 규제환경과 그에 따른 가능성의 범위를 이해하는 기업들은 앞으로의 변화 속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각 기업은 비즈니스 생태계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변화에 직면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제조사는 제품을 재활용하거나 기존보다 제품 사용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생산 과정에 필요한 희토류의 양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 리테일 기업들은 중고 및 업사이클 제품을 제품 믹스에 포함하거나, 차량 및 자전거 공유 서비스 등을 운영해 소비자들의 도시 내 이동방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일용소비재(CPG) 기업들은 이미 투자자, 새로운 제품 컴플라이언스 요건, 주요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대외 투명성 기준에 맞춰 제품을 재설계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받고 있다.

- ☑ 환경 친화적 제품의 라벨링을 명확하게 하여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을 분명히 표시하라.
- ☑ 폐기물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품 포장을 재설계하라.
- ☑ 빨대, 쇼핑백, 컵 등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라.
- ☑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도록 제품을 재설계하라.
- ☑ 순환 혁신 방식과 함께 소비자들의 보상판매 솔루션을 개발하라.



사업전략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역량을 보여주면, 기업 리스크를 줄이고,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여 현재 아태 지역에서 부상하는 강력한 상업적 기회에 맞춰 소비자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의지가 있는 기업들은 다음의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행동에 옮길 필요가 있다.

- ☑ ESG 관련 성과, 위험, 기회를 공시하라.
- ☑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라.
- ☑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폐기물을 감축하고 물 사용량을 줄여라.
- ☑ 유연 또는 원격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탄소배출 감축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직원들의 기후행동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하라.
- ☑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 인력의 업스킬 및 전환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스킬(skill, 실무능력) 전환 팀'을 구성하라.
- ☑ 시범사업 및 혁신 연구에 자금을 투자하고 탈탄소화를 적극 장려하는 등 기후변화 기술에 투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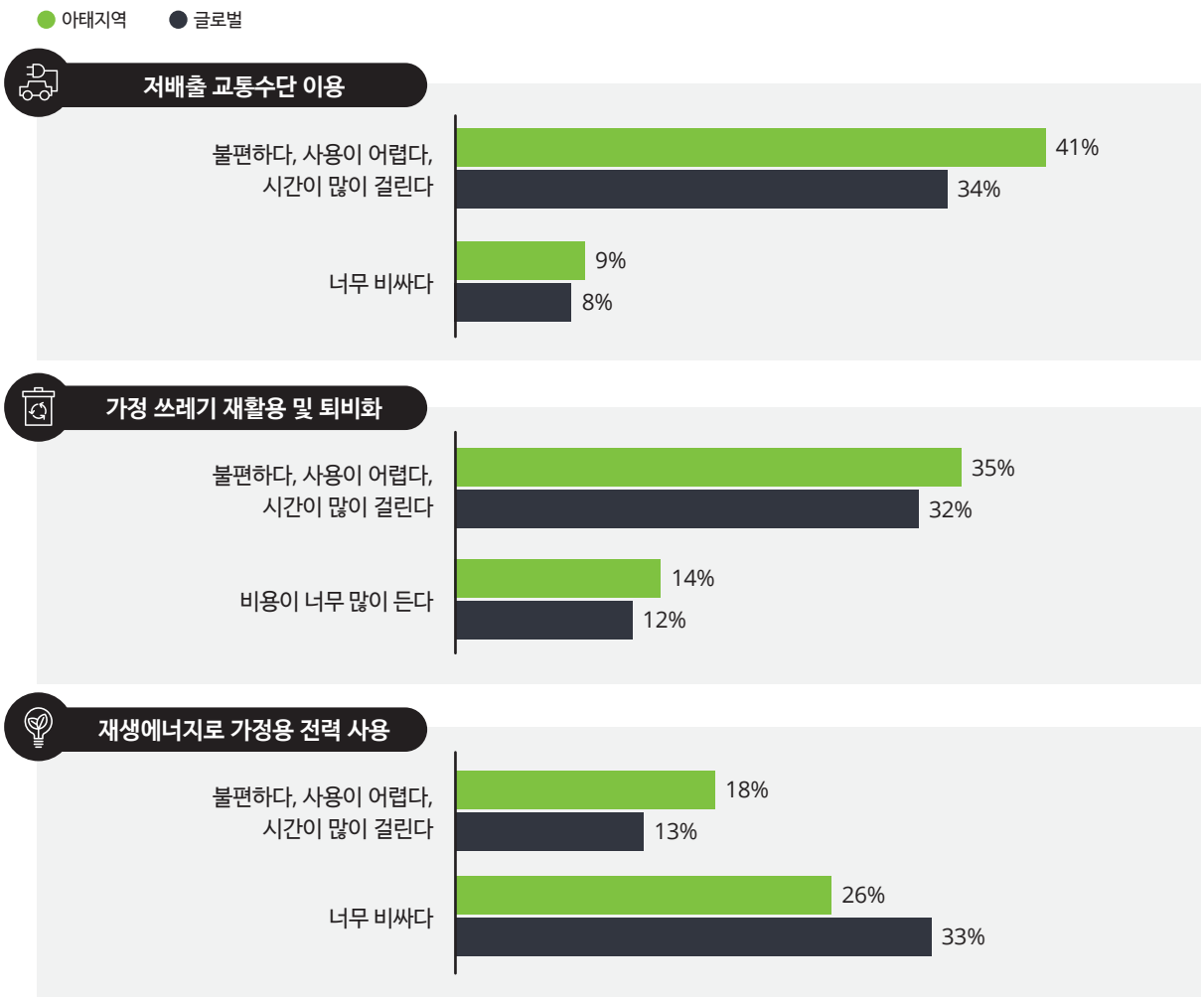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용적 선택을 하면 기업의 전환 능력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에 대한 대응 능력까지 보여줄 수 있어,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이미지가 개선된다. 아태지역 소비자들의 높은 환경의식을 강력한 상업적 기회로 간주하고 지금 행동에 나서는 기업들이 결국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 04 정부 정책과 시스템 변화가 탄소중립 전환 촉진한다

탄소중립 전환에 있어 기업계의 참여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다. 시스템 차원의 전환을 달성해 아태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려면, 정부가 나서서 재료과학 연구, 재생에너지, 청정 인프라 등에 투자해야 한다.

현재 소비자들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생활방식으로 바꾸고 싶어도 몇 가지 현실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딜로이트 서베이에 참여한 아태지역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기후행동을 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비용, 편의성, 시간 등을 꼽았다(그림 10). 이러한 간극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정책과 규제 환경을 만들고 사회 모든 부문이 지속가능 행동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림 10. 소비자들의 지속가능 행동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출처: 딜로이트 글로벌 컨슈머 트래커(Deloitte's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2023년 3월

대부분의 아태 국가 정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에 이미 착수했다. 각 지방정부 단위, 산업별, 섹터별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전략이 이행되고 있고,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기반 접근법도 도입했다.

일례로 뉴질랜드 정부는 자동차 부문에서 청정 자동차 표준을 도입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청구하는 한편, 저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해 소비자의 지속가능 선택을 유도한다. 인도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州) 정부는 환경 친화적 건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존 건물의 리노베이션이나 정부청사 신축 시 '국제친환경건축위원회'(International Green Building Council)의 친환경 건물 등급 체제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태지역 내에서도 진전 속도는 국가와 지역마다 상이하며, 견고하고 강력하며 기후 회복력을 갖춘 아태지역을 만들기 위한 사회의 열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아태지역 곳곳에서 도입되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 법안 외에도 저탄소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 ☑️ 지속가능한 금융시장 구축

각국 정부는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등 녹색금융의 기반을 만들고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협력을 통해 미화 1,570억 달러 규모의 '녹색 전환' 채권 발행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sup>9</sup>

#### ☑️ 시스템 변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각국 정부는 민간 부문과 협력해 자연 친화적 솔루션 및 에너지 전환에 기반을 둔 새로운 가치사슬을 만들어 대규모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배달음식 용기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마이크로칩으로 변환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을 합성리류 생산 재료로 사용하는 공장이 생겼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사슬이 탄생한 것이다.<sup>10</sup>

#### ☑️ 탄소시장 구축

한국의 탄소포인트제도가 좋은 사례이다. 전기·상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사용량을 절감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고, 멤버십 기능이 있는 그린카드를 발급받으면 소비자들이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 캐쉬백으로 돌려받거나 통신비, 대중교통 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도 이행되고 있다.

#### ☑️ 전방위적으로 낮은 규제 및 폐기물 처리 법안 개정

긍정적 기후 및 환경 성과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가 수립됨과 동시에 기업들이 엔드투엔드(end-to-end) 공급망 내 글로벌 규제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시장에 선순환이 창출된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인도의 '배터리 폐기물 관리지침'(Battery Waste Management Rules)은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따른 것으로, 이에 따르면 생산자, 수입업체, 브랜드 소유 기업이 모든 배터리 폐기물을 수거해 재활용/재수리하도록 하는 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 폐기물이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sup>11</sup>

☑ 투명성 요구

정부는 기업들에 지속가능성 진전 상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진전 단계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대형 금융기관들에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정부의 신규 법안이 통과됐다.<sup>12</sup>

☑ 자금 및 기업 전환 지원 제공

탄소중립 전환과 기후변화 기술을 도입하는 부문과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긍정적 기후 및 환경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호주의 탄소배출권 제도인 배출감축기금(ERF)은 온실가스 배출을 막거나 탄소를 대기로부터 제거 또는 격리하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토지 소유자, 지역사회,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한다.<sup>13</sup>

☑ 지속가능 선택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세금 감면 또는 크레딧 제도 등을 도입해 광범위한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친환경 개발을 장려하고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상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를 도입했다. 전기차 취득세를 감면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고배출 차량에 대한 세금은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sup>14</sup>

각국 정부는 이처럼 사회 각 부문의 모든 참여자들과 협력해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05 견고한 저탄소 경제 창출을 위한 협력



이제 막 팬데믹을 극복한 전 세계는 경제 성장이 지구라는 물리적 공간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갈수록 체감하고 있다. 자연 생태계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으면 인류는 경제 성장도 번영도 이룰 수 없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시작한 지금, 소비 주도 경제 성장은 건강한 환경과 사회의 웰빙을 포함한 더욱 총체적인 경제적 건전성이란 정의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렇게 순환경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 기업, 고객, 지구를 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 및 사업 기회가 창출된다. 이는 더욱 건강한 지구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아태지역 민간기업들은 강력한 소비자 수요를 발판 삼아, 더욱 환경 친화적 제품을 제공하고 모든 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공급 또는 프로세스 혁신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환경 피해를 줄임과 동시에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환경의식이 갈수록 높아지는 아태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의 핵심이다.

정부는 연구와 기술에 투자하는 한편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적용되는 확실하고 효과적인 표준을 제시하는 실용적 규제 체계를 수립해 이러한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듯 기업과 정부는 힘을 합쳐 기후 회복력을 갖춘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전환을 주도할 수 있다.



부록

아태지역 각국의 주요 기후관련 법률

| 국가 | 주요 기후관련 법률                                                                                                                                                                                                                                                                                                                                                                                                          |
|----|---------------------------------------------------------------------------------------------------------------------------------------------------------------------------------------------------------------------------------------------------------------------------------------------------------------------------------------------------------------------------------------------------------------------|
| 한국 | <p>한국 정부가 2020년 12월 7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모든 부문에 청정 에너지와 수력발전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 정부는 탄소 흡수계와 순환경제를 확대하고 탄소제거기술을 도입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는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 추진을 말한다.</p>                                                                                                                                                                        |
| 호주 | <p>2022년에 도입된 '기후변화 법안'(Climate Change Bill)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3%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은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생산, 에너지 소비 등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p>                                                                                                                                                                                                |
| 중국 | <p>중국은 파리 협정을 확고한 태도로 이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대하며, 2030년 이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세로 전환토록 하고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기후행동과 전 세계 청정 및 저탄소 경제 개발에 강한 자극을 주고 있다.</p> <p>중국의 탄소 집약도는 이미 누적적으로 18.8% 감소하였으며, 청정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4%에 이른다. 중국은 또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 구축과 전력 생산 면에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p>                                                    |
| 인도 | <p>2008년 6월에 도입된 '국가 기후변화 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도의 구상을 포함한다. 이는 에너지, 산업, 농업, 수질, 삼림, 도시공간, 취약한 산악지대 등 상호 긴밀히 연관된 영역에서 기후행동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p> <p>인도의 2021~2030 NDC는 청정 에너지로 전환을 위한 인도의 프레임워크에 해당한다. 이는 세계 혜택과 인센티브 등 여타 이니셔티브와 더불어, 인도의 제조 역량 및 수출을 강화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산업에서의 녹색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인도 정부는 기후 적응과 완화 두 가지 측면에서의 행동을 확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p> |

일본

일본 정부의 '청정 에너지 전략'은 2030 회계연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6%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무탄소 전환을 위해 수력 발전을 강화한다는 것이 중심 행동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이 2022년 5월에 발표한 '청정 에너지 전략' 중간 보고서에서 수력발전 공급망 구축, 수력발전 활용 확대, 인프라 개발 촉진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203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50% 줄인다는 목표로 탄소감축 및 국가적응 계획을 수립했다. 뉴질랜드 정부가 도입한 '2022년 7월~2025년 6월 지속가능성 전략'은 국가가 기준선 내에서 운영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번영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는 '공정 전환 부서'(Just Transitions Unit)를 꾸려 저탄소 경제 전환 과업 공유 및 조율을 지원하고 있다.

대만

대만 정부는 2050년까지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달성한다는 내용의 '2050 대만 넷제로 로드맵'에 착수했다. 이 계획은 재생에너지 최대화, 화력발전 탈탄소화, 석탄의 단계적 퇴출, 무탄소 연료 공급 시스템 구축, 관련 최첨단기술 도입 등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주석

1. Helen Davidson, "China drought causes Yangtze to dry up, sparking shortage of hydropower," Guardian, August 22, 2022.
2. Gem O'Reilly, "Australia flash flooding: Thousands evacuated,"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BBC), November 14, 2022.
3. Jayashree Nandi, "Sea-level rise a major threat to India, other nations: WMO," Hindustan Times, February 15, 2023.
4. Tess McClure, "Cyclone Gabrielle worst storm to hit New Zealand this century, says PM," Guardian, February 14, 2023.
5. Rebecca Leber, "Why Asia's early heat wave is so alarming," Vox, April 19, 2023.
6. Rebecca Ratcliffe, "Endless record heat in Asia as highest April temperatures recorded," Guardian, April 27, 2023.
7. Pradeep Philip, Will Symons, and Claire Ibrahim, "Asia Pacific's Turning Point: How climate action can drive our economic future," Deloitte, August 2021.
8. Philip, Symons, and Ibrahim, "Asia Pacific's Turning Point."
9. Ibid.
10.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Australia's climate change strategies," December 1, 2022.
11. Reuters, "Japan lays out plan to issue \$157 bln in 'green transition' bonds," May 19, 2022.
12. David Belcher, "In South Korea, an emphasis on recycling yields results," New York Times, May 21, 2022.
13.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 "Government notifies Battery Waste Management Rules, 2022," press release, August 25, 2022.
14. New Zealand's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Mandatory climate-related disclosures," January 18, 2023.
15. Australian Government's Ministry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Emissions reduction fund," November 3, 2022.
16. Arendse Huld, "China lays fiscal policy foundation for reaching carbon targets," China Briefing, June 16, 2022.

# 딜로이트 ESG 센터

에너지·자원·산업재, 소비자, 금융, 바이오·헬스케어, 첨단기술·미디어·통신, 정부·공공 등 깊이 있는 산업별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ESG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기업의 실효성 높은 저탄소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합니다.



## 백인규 파트너

ESG Center |  
ESG Center Leader & Board Chair

Tel: 02 6676 1345  
Email: inbaek@deloitte.com



## 니콜라 위어 파트너

ESG Center |  
Sustainability & Climate Leader

Tel: 02 6676 3178  
Email: nweir@deloitte.com



## 강상욱 파트너

Audit & Assurance | ESG Leader

Tel: 02 6676 1562  
Email: skang@deloitte.com



## 연경흠 수석위원

Audit & Assurance | ESG

Tel: 02 6676 1949  
Email: kyeon@deloitte.com



## 김병삼 파트너

Audit & Assurance | ESG

Tel: 02 6099 4277  
Email: byungsakim@deloitte.com



## 허규만 파트너

Audit & Assurance |  
ESG 공시 · 인증 TF Leader

Tel: 02 6676 1454  
Email: kyhuh@deloitte.com



## 박태호 파트너

Risk Advisory | ESG & Climate

Tel: 02 6676 2163  
Email: taehpark@deloitte.com



## 이옥수 파트너

Risk Advisory | ESG & Climate

Tel: 02 6099 4425  
Email: okslee@deloitte.com



## 유준혁 파트너

Risk Advisory | ESG & Climate

Tel: 02 6676 3096  
Email: junyoo@deloitte.com



## 이종우 파트너

Financial Advisory |  
Energy & Infra Service Leader

Tel: 02 6676 1399  
Email: jongwlee@deloitte.com



## 최용호 파트너

Consulting |  
Strategy & Business Design-ER&I

Tel: 02 6676 3776  
Email: yongchoi@deloitte.com



## 박준웅 파트너

Tax & Legal | Business Tax

Tel: 02 6676 2363  
Email: junypark@deloitte.com

# Deloitte.

## Insights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 컨설팅  
성장전략본부

손재호 Partner  
성장전략본부 리더  
jaehoson@deloitte.com

정동섭 Partner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dongjeong@deloitte.com

김사현 Director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sahekim@deloitte.com

HOT LINE  
02) 6099-4651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